

“남북 공동조사·군사통신선 복구 요청”

文대통령,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북측 신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긍정 평가” “사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결과를 알렸다. 서 제1차장은 “오늘 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며

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며 북측을 향해 첫 공식 요청했다. 또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

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서욱 국방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1차장이 참석했다. /뉴스

‘무궁화10호’ 목포 복귀 北 피격 공무원 사고 6일만

피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무궁화10호가 사고 6일만, 출항 11일만인 27일 전남 목포로 복귀했다.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는 이날 정오께 실종 공무원 A(47)씨가 탑승해 있었던 무궁화10호가 입항했다. 목포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무궁화10호는 10분여만에 전용부두로 들어섰고 출항 대기 중이던 무궁화8호, 무궁화29호 사이에 멈췄다. 이어 선박이 완전히 정지하자 10여명의 선원들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선박 위에서 정박 준비를 서둘렀다. 선원들은 무궁화10호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선수에 있던 밧줄을 옆에 있던 무궁화29호에 던졌다. 선미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펼쳐졌다. 선박 정박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자 한 선원은 선수 끝부분에서 접혀있었던 ‘해양수산부 깃발’을 펼치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서해상 어업지도를 위해 출항한 지 11일만, 공무원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1일 오전 이후 6일여만에 복귀이다. 무궁화10호의 승선원은 모두 귀가 조치되며 차기 출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력이 조사하고 있어 내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추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출항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격 실종된 선원의 동료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총격에 의해 숨진 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수부 어업지도원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는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지난 16일 출항했다.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 방문해 피해주민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현장에서 즉시 검거”

“서울시 경계·한강 다리·집회 장소 등 삼중 차단 조치”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 대응…집회 철퇴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일부 보수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속히 확인하고 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백신 조달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데 대

문체부 국고보조금 실적행률 20%

이병훈 의원 “주무장관 재량 탄력적 예산운용을”…대규모 불용 우려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실적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적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조35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기준 총 2조7454억원을 교부해 63.1%의 교부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9117억원으로, 상반기(1월~6월) 실적행률은 예산현액의 5분의 1을 겨우 넘긴 20.9%에 불과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15위에 해당하는 집행률이며, 외교부·통일부 등 1조원 미만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8개 부처를 제외하면 10개 부처 중 꼴찌다. 실적행률이 낮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업계의 각종 사업, 공연,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정부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무장관의 재량범위 안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사업집행을 독려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안철수 “지속가능한 새 방역 대책 모색”

확진자 나온 말바우시장 방문…상인 위로·제수용품 구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석 앞둔 27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말바우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실내 공연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고 좌석 간격별 내부 공기 흐름을 조사하는 등 감염 최소화 방안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여파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도 지속가능한 예방·방역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바우시장 박창순 상인회장은 “상인들은 새벽부터 일을 하고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생긴다. 방역 대책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안전지대를 만드는 한 단계 높은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에서 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아케이드 사업과 280면 규모의 주차장만 짓고 있는 상태”라며 “특색을 살려 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가 일시 폐쇄했다가 영업을 재개한 국밥집에 들러 업주를 직접 위로하기도 했다. 안 대표와 당직자들은 이날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굴비·감·떡 등 30만원 어치 제수용품을 구매했다.

青 김현중 2차장 16~20일 방미후 귀국 한미동맹·대북문제 논의…백악관·국무부 등 면담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사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너인 매슈 포터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뤄진 방미 일정인 만큼, 우리 측이 발신할 대북메시지를 미국 조야에 사전에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중전선언’ 카드를 꺼내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난항

오늘 본회의 개최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야당에서 긴급현안질의 없는 결의안 채택은 안 하겠다고 통보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북규탄결의안을 우선 채택하자는 여당과 긴급현안질의를 전제로 내건 야당의 입장 차로 28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김 수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두 번에 걸쳐 사과 성명을 발표한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청와대, 북한

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비서·보좌관·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 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전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 만원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북미시민은사과함에